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

2015년 3월 21일(토)~22일(일)

서강대학교

- 주최 -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강대학교 여성주의학회 불꽃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색 여성주의학회 어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후원 -

청년서강 45대 총학생회 MATE



성소수자 정당 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

일 시

2015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1:00~3:00

장 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K202호

사 회

곽이경

발 제

“붉은 이반부터 18대 대선까지. 과거 선거와 정책을 통해 본 성소수자 정치”

녹색당 김도화

“진보정당 흐름 속, 멈출 수 없는 성소수자 정치세력화”

정의당 정혜연

“2016년 총선,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커밍아웃하라”

노동당 박자민

토 론

“시민/유권자로 성소수자에게 다가가는 진보정치”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치의 관계 모색”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노동당

정의당



녹색당

GREEN PARTY KOREA

붉은 이반부터 18대 대선까지. 과거 선거와 정책을 통해 본 성소수자 정치.

김도화(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현실정치에서 성소수자의 가시적 행보는 2004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여야의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2003년 청소년 보호법의 '동성애 차별조항 즉각삭제' 운동 등에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성소수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진보 정당 혹은 진보 정당의 의원/활동가가 함께 참여한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이를 현실정치 특히 정당 내에서 성소수자가 정치세력으로서 드러난 예로 보기에는 어렵다. 90년대 시작된 성소수자 시민운동보다 약 10년이 늦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현실정치에서 성소수자가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붉은 이반과 붉은 일반

2004년, 민주노동당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정치를 정책 기본방향으로 설정'이라는 정책의 기본방향 아래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동성애자 결혼권과 입양권을 포함한 동거제도 도입' 그리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및 처벌조항 마련'을 사법/윤리분야 정책 공약에서 제시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정당 중에서는 사회당만이 유일하게 '동성 배우자 간 결혼 인정', '성전환자의 성별·호적·주민등록번호·이름 정정권 부여', '성전환자의 노동권 보장', '매체에서 동성애 관련 왜곡 표현 규제 및 처벌', '성소수자 교류 억압 인터넷 내용등급제 완전 철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이 제시된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 정책을 총선 공약에 포함하고, 기존에 동성애 인권운동을 지지해온 동성애자 단체와 개인 약 76명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 13%의 정당투표 득표율로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해 원내 정당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 원내 정당 진입 이후 민주노동당 내부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큰 사건이 생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입후보한 이용대 후보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인 민지네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라는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파행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는 발언을 하고 최고위원에 입후보한 김진선 후보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 모임 '붉은 이반'의 질의서에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는 언젠가 이성애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많은 성소수자들이 우려를 표했고, 단체들이 반발했으며, 민주노동당 당내 모임인 '붉은 이반'은 강령에 성소수자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근거로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진행하고 성공했다. 여기엔 '붉은 이반'을 지지하는 이성애자 모임인 '붉은 일반'도 구성되어 지지서명과 모금 운동을 통해 '붉은 이반'과 함께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붉은 이반'을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당내 성소수자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소수자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 정당사 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 위원회는 당내 성소수자 인권교육으로 활

동을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의 성소수자위원회는 출범 이후 다양한 성소수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우선 2004년에는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問診)에서 '동성(同性)과의 성 접촉 여부'를 묻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2006년 말부터 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를 하며 '성전환자 성별 정정 특별법안' 발의를 위한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2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무산된 법안을, 성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요건을 제시하며 2007년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또, 2006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과 당원, 당 외 활동가가 함께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생활동반자법'의 모태가 되는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2006년에는 성소수자 정치캠프를 열고,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상황에도 사례별로 대응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법무부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확산 조장'을 이유로 7개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자 이에 민주노동당이 주도적으로 수정법안을 마련하였고,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동성 커플의 사실혼 법적 인정'과 '성소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성소수자 운동에서 '정당'은 익숙지 않은 존재였지만 성소수자 위원회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정책·공약 제시 이후 '진보정당'에서 성소수자 이슈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2008년은 성소수자의 현실정치 참여에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출범한 2004년 만큼이나 중요한 해로 기억된다. 진보신당의 최현숙 후보가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으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총선에 출마한 해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큐멘터리 영화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2009)로도 만들어져 개봉되었다. "대한민국이여 커밍아웃하라"는 선거운동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으로 드러낸 최현숙 후보는 출마를 통해 정치권 그리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를 가시화했다.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걸고 출마한 만큼 최 후보는 '차별금지법'과 '동반자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정책콜로키움에서 '성정치와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성소수자 인권 현실과 제도 개선을 발제하기도 하였다. 최 후보는 결국 총선에서 1.61%의 득표율을 받고 낙선하였지만, 성소수자가 현실 정치에서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

최현숙 후보의 총선 출마와 함께 진보신당은 성정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성정치 위원회는 기존의 성소수자위원회와 달리 35세 미만 전세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청년운동과 연대하여 정책에 내놓는 등 성소수자 의제 외에도 다양한 의제에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18대 총선에서 '군대에서의 성소수자 인권 보장', '생활동반자 관계 공동체의 법적 지위 보장', '성소수자 인권실태 조사', '언론 및 방송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 '성전환자의 성별변경권리 보장과 성전환수술 건강보험 적용', 'HIV 감염임 인권 보장', '학생 성소수자 인권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총선 후보들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의 '18대 총선, 무지개 정치를 말하다'에서 '성소수자 반차별 선언'을 했다.

2010년 이후의 정치세력화

2010년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두 번째로 시도된 해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무지개행동, 반차별공동행동과 공동 주체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성소수자 단체와 함께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을 비롯한 단체의 동성애혐오조장 중단을 촉구하고, 조속히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계기로 각 성소수자 단체가 정치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각 후보자에게 성소수자 요구안을 마련했고, 무지개 행동은 '우리 동네 무지개가 떴어요' 캠페인을 진행하여 각 지역의 성소수자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 '마포레인보우유권자연대(마레연)'가 만들어져 마포지역 후보자들을 초청하고, 질의서를 보냈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친구사이는 전구의 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를 보내고 답변을 준 후보를 공개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이 다양하게 펼쳐진 2010년은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정치 의견 표명이 더욱 활발해짐과 동시에 성소수자가 정치세력화를 통해 현실정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해였다. 덧붙여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공약들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2012년은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이 함께 있는 해였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견 검증이 치열했고 또 성소수자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등장한 해였다. 제19대 총선에서는 기존의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으로 합당 되면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새롭게 합당 된 통합진보당이 2012년 창당된 녹색당과 진보신당이 성소수자 인권운동 및 지지단체와 정책연대를 맺어 성소수자 인권 5대 영역, 20개 과제 실현을 위해 논의한 정책을 총선 공약과 당의 중요 정책 과제로 채택했다. 당시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게이유권자파티 준비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정책 질의를 하고 결과분석 후 공유하기도 하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도 내부 경선에서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한 후보가 두 명이 출마하였고, 당내 성소수자 인권모임 '노란무지개'가 제안되었으며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성소수자 차별 철폐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차별금지법' 등을 우선순위로 해결할 것을 밝혔다.

제18대 대선에서도 성소수자 정책에 대한 검증에 대한 열기가 지속되어 무지개행동이 각 대선 후보캠프에 성소수자 정책 질의서를 보내 종합하여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 5항 폐지', '동성결혼/파트너십', '트랜스젠더 성별변경',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 '방송 미디어 등에 나타나는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입장과 '주거, 의료,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에 있어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계획' 등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답변을 하였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후보의 경우 높은 이해수준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검증이 있는 와중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경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는 발언을 하여 무지개 행동이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 항의 성명과 질의서를 보냈다.

나가며

이처럼 1990년대 사회운동으로 시작된 성소수자 운동이, 2004년을 기점으로 정치적 주체로 나서고 있고, 성소수자들은 이제 현실정치에서 꾸준히 정치세력화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진보정당에서는 성소수자 이슈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정당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고 현재 진보 정당들에는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같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논의하는 위원회들이 존재한다. 이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 내에서 '비시민'으로서 존재해온 성소수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현실정치의 장으로 발을 내디뎠고,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로 나선 유의미한 발자취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합당이나 분당과 같이 정당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성소수자와 관련된 위원회들의 지속성이 떨어졌고 뚜렷한 정치적 성과 또한 얻어낸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정당의 조직으로서 꾸준히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 발표하고 성소수자들의 정책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진보정당과 각 정당의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성소수자 시민 단체에 비해 잘 해오지 못한 것이다. 정당이란 이익집단과 달리 선거에서 공식적 브랜드를 만들어 공직을 목표로 한다.(Sartori 1976) 각 정당에서 성소수자/성정치 위원회가 꾸준히 성소수자 이슈를 다루고 성소수자의 삶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면, 성소수자의 사회적 가시화는 물론이고 성소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적 욕구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정치 안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더 나은 삶은 이를 고민하는 정당들에 달려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각 정당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소수자 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진보정당 흐름 속, 멈출 수 없는 성소수자 정치세력화

- 각 삼당 위원회의 시작과 현재

발제 : 정혜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삼당위원회의 시작을 보면 진보정당의 흐름과 선거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다. 민주노동당 서부터 시작하여 진보신당 창당, 통합진보당의 창당과 분당, 녹색당의 창당 속에서 함께 해왔고 각 선거 때마다 참여해왔던 것이 각 삼당 위원회이다. 성소수자 정치의 문제의식은 진보정당의 흐름과 언제나 함께 해왔으며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슈화 되었다. 지난 그 흐름을 되짚어 보고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진보정당의 흐름과 선거에 있어 성소수자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망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 진보정당과 함께 시작한 위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는 2008년 총선, 종로구 최초의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였던 최현숙 선거의 결과를 이어가는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으로 시작하였다. 최현숙 선거를 통해 진보정치인과 성소수자 정치인 사이에서의 성소수자 정치세력화의 의미를 물었고, 이를 신호탄으로 진보신당 안에 성소수자정치의 고민이 담긴 성정치기획단이 결성되었다. 이전 민주노동당에서 썼던 성소수자위원회라는 이름이 아닌 성정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하는 소위 '4인 가구' 기준의 한국 행정체계 등에서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다른 소수자들의 고통이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보적 성정치를 통한 사회 재구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성정치위원회가 제기한 만 35세 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슈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녹색당은 창당초기 성소수자 의제모임 준비 모임이 몇 차례 있었으나 아웃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조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2014년 초, 주제별 대중강연을 하면서 당 내외에 성소수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하게 되었고 당사자 운동의 확대, 이슈대응을 폭 넓게 하기 위해 소수자 인권특별위원회 형태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슈, 캠페인을 포함한 정당의 정책 활동을 띠면서 소수자 인권활동을 고민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4개 분야 32개 세부정책을 발표 했으며 서울, 은평 등 지역에서 인권조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 했었다.

성소수자 모임으로 시작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진보정의당 창당 초기부터 함께 해왔다. 진보정당의 연속된 분열의 과정 속에서 주변화 된 진보정치는 이곳에 결합된 많은 운동들의 역량을 상실했다. 활동가들이 부문위원회와 성소수자 정치에 희망을 가지고 진보정당에서 일궈낸 많은 결과물, 노력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사그라져 가는 것이 2012년 진보정당의 현실이었다. 식어있는 '진보정치를 통한 열망'에 다시 불을 지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새로운 주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가시화, 당원들에 대한 일상 교육 등 기본 밑바탕 일부터 시작했고 연대활동을 통해 위원회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럼과 동시에 끊임없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당의 목소리를 강화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진보정당의 통합과 분열, 그리고 새로운 창당과 활동 모색 속에서 각 삼당의 위원회는 끊임없이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 이슈를 던지고자 했다.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부문위원회는 당의 지원과 당 외부와의 소통을 통해 부문위원회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당의 '부문위'의 역할에서는 성소수자의 삶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한계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소수자 정치가 한국의 현실 정치 위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와 역할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더 고민해보고자 한다.

- 당내에서 부문위원회의 위치와 역할

다른 보수정당들과 다르게 진보정당에는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에 대한 부분이 강령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어, 부문위원회의 활동을 만들어가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은 아니다. 약소정당이다 보니 재정적 지원이 크지 않아 활동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당원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당의 다양성과 인권분야 활동에 대한 열망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내고 있고 당원필수교육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 단체들과 진보정당의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부문위원회'로서 역할도 해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있을 뿐 당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써의 힘은 크지 않은 부분도 있다. 대의원할당, 전국위원 등의 당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할당되었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의회에서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진보정당의 분열 속에서 함께 약화된 진보정치 자체 내의 역량 한계, 당내 영향력 부족 등과도 관계 되어있다.

민주노동당 초기에 일부 정파의 성소수자 혐오발언에 대응하고 성소수자위원회를 건설하는 활동 이외에는 성소수자가 정당 내에서 당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이력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성정치위원회의 주요 활동가들이 진보신당 시절 당직 선거에 부대표 후보로 최현숙을 지지하고 지원했던 일은 있다. 그러나 진행된 선거는 당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당내 정치력에 있어서는, 실무적 활동을 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다른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부문위원회는 성소수자 이슈가 터질 때, 중앙당과 의원실을 통해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제와 봤을 때 그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았고 존재감도 크지 않았다. 그것은 여러 정치적 사안이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당 내부에서 시작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시작된 사안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개인적인 성과를 위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서울시의 시민인권헌장 등은 우리 내부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의제가 아닌, 부문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성소수자 의제를 제안할 수 있는 내부역량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했다. 그리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당 내부 부문위원회 안에서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전체 정치구도에서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진보 전체의 역량 감소와 진보정치에 대한 낮아진 열망, 정파와 몇몇의 목소리들만이 과대대표 되고 있는 한국 정치 구도, 양당구조의 고착화로 인한 성소수자 의제를 실현해낼 정치적 도구의 부족은

단지 부문위 안에서의 시각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다.

- 한국 정치 구도 내에서의 한계, 그리고 그 변화 가능성

세 정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전 민주노동당보다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 정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과거 시민단체, 노동 쪽과 함께 진보정당을 통해 발의되었던 많은 의제들이 새민련의 일부 소수 의원들을 통해 발의되고 있다. 성소수자 영역 역시 비슷한 상황이 연출 되었다. 성소수자의제들이 새민련 의원을 통해서 발의되고 진보정당은 이전과 같은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 3년간, 제 3 정당의 가능성이 계속 무너지고 양당구도가 점점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목소리 내기란 더욱 더 어려워졌다. 한정된 정치적 도구와, 진보정당 안에서 낮은 영향력으로 부문위원회가 성소수자의제를 실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한계 속에서 뚜렷한 제 역할을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소수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 속에서 서울시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혐오발언과 폭력을 방관하였고, 아주 기본적인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박원순 시장이 혐오에 가장 앞장서는 목사들 앞에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동성애 혐오를 인정해버렸다. 이에 대해 세 진보정당이 강력한 비판을 던질 때, 새민련은 어떠한 발언도 꺼내지 않았다. 전시행정으로 인권도시 타이틀을 가져가고자 했던 박원순으로 인해, 공론의 장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의제 대신 혐오가 등장해버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작년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 때도 일어났다. 차별금지법을 자신의 성과로써 가져가고자 했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보수 기독교 세력 눈치만 보다가 자체 철회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 이후로 차별금지법은 꺼내기조차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진보정치가 약화되고 제 1야당이 동성애 혐오에 쉽게 무릎꿇어버리는, 이 정치판에서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위기의 상황과 함께 감지되고 있다. 철웅성 같았던 호남-영남의 대결구도가 무너지고 호남에서의 새민련의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 전남에서 첫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과 정동영과 천정배의 탈당은 그것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새민련의 지지층이 이렇게 점차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성소수자 의제를 대하는 새민련의 자세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지지층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잊고, 당면한 진보적 사안에 있어 어떠한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는 새민련은 결국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 1야당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진보의 질적 전환을 통한 야당의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질적 전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진보의 세를 키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기존의 적대와 낡은 정파 틀을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진보의 주체와 지지층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 몇몇의 목소리들만이 과대대표 되고 있는 한국 정치 구도에서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질적인 진보정치와 성소수자 정치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성소수자들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어 진보의 질적 전환을 이끌어내고 그 중심 속에서 소수자 억압, 혐오, 차별들의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를 세우자는 것이다.

우리 성소수자 세력은 정파로부터 자유롭다. 그와 동시에 성소수자 이슈는 새민련과 진보정당을 명확하게 분별해 줄 수 있는 사안이자 제 1야당이 교체되어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무지개 농성을 통해 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새민련에게 경고할 수 있는 세력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성소수자의 인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 사회의 배제된 자들을 이야기 하고 함께 뛰어들어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것은 더 큰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자면 성소수자에게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이 단지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다른 소수자들에게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더 넓은 시야 속에서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 하는 것이 진보의 질적 전환과 성소수자 정치세력화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다각화된 성소수자 운동의 정치화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운동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성장해왔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활성화, 트랜스젠더 운동의 활성화, LGBTI 욕구조사 발표, 동성결혼 소송 등, 운동 또한 성소수자의 삶처럼 다각화되고 풍성해지고 있는데 반해 정치에서는 그런 다양한 논의들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차별금지법, 시민인권헌장 등은 다양해진 성소수자 운동 담론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한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나아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민운동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논의들을 시민운동과 함께 현실에 반영시키고 성소수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벌어진 간극을 좁혀나가고 성소수자를 진보 정치의 주체로 세워 보수가 일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전면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국사회의 모순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주도해야한다. 시민단체,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정당이 주도하는 이슈를 바탕으로 성소수자가 진보 정치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LGBTI 욕구 조사에서 드러난 우리의 욕망, 욕구들이 제대로 정치를 통해 재현되어야만 한다.

2016년 총선, 대한민국이여 (다시 한번) 커밍아웃하라!

박자민(노동당 성정치위원회 위원장)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 성소수자 정당운동 10년을 지나오며 한국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개선되어왔다. 퓨리서치센터가 2007년과 2013년 실시한 조사¹⁾에 의하면 한국은 동성애에 대한 포용의견이 18%에서 39%로 조사대상 국가 57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포용의견이 증가한 국가이다. 보다 오랜 기간차이를 두고 2001년과 2014년 실시된 한국갤럽의 동성애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호의적인 응답이 2001년에 비해 2014년에 평균 17% 증가했다.²⁾

그러나 성소수자가 인식하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³⁾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인식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3%가 한국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지난 20년간 해온 노력에 비해 한국사회가 제도적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성소수자가 선택한 중요한 정책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차별금지법제정과 동성결혼은 물론이고 조사대상 항목 가운데 어느 것도 의회에서 논의조차 없는 상태이다.

성소수자가 선택한 중요한 정책적 이슈에서 응답자수 상위권의 문항들은 대부분 행정부의 역할보다 입법부가 담당하는 영역의 항목들이다. 그러나 성소수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서 '선거와 정당참여'는 최하위 응답(8%)을 기록했다. 성소수자 관련 주요 정책이 논의되고 이것이 성소수자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생략된 한국정치를 성소수자가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 성소수자 위원회를 세우고 정책을 마련해온 진보정당이 새누리당(75%)과 민주당(51%)에는 못 미치지만 29%의 부정 평가를 받은 것은 진보정당내 성소수자 운동의 10년이 부정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정치 불신의 불뚝이 튼 것일 수도, 진보정당이 주도적으로 성소수자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10년간 해온 성소수자 정당운동에 전환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니엘 튜더의 칼럼에 주목해야한다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탄생한다면 그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일 것이라는 외신기자출신 칼럼니스트의 기고문⁴⁾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박원순의 인권헌장 폐기 사태와 무지개농성단의 서울시청 점거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 보수 일간지에 실린 칼럼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박원순에 대한 실망감으로 동조하는 의견과 '새누리당과 한국정치를 너무 모른다는' 회의론이 맞섰다. 가능성은 둘째 치더라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소수자 개인의 보수화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성소수자 운동과 연대해온 진보정치는 다시 한번 무능함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보수 정당이 명망 있는 성소수자를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도 영원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1) 'The Global Divide on Homosexuality', Pew Research Center, 2013

2) '데일리오피니언 제143호', 한국갤럽, 2014

3)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4) '[삶의 향기] 동성애 어젠다와 대한민국 진보주의', 중앙일보, 2015. 1. 3.

미국에서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처음으로 하원선거에 당선된 80년대부터 현재까지 9명의 성소수자 하원의원(하원 정원 435명)이 당선됐고, 2012년에는 처음으로 성소수자 상원의원(상원 정원 100명)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인 민주당 출신은 아니다. 1994년 임기 중에 성적체성이 폭로된 스티브 건더슨과 임기 중에 커밍아웃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짐 콜브는 공화당 소속의 의원이었다. 비록 연방의회에서 더 이상의 공화당 소속 성소수자 의원이 탄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커밍아웃한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지역의회에서는 공천을 받고 당선되는 등 성소수자 정치가 온전히 미국 민주당의 역할은 아닌 상황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7년 민주당이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인 오쓰지카나코를 참의원(상원, 정원 242명)선거에 공천한 이래 2011년 사민당 소속 이시가와 타이가가 최초의 성소수자 공직선거 당선자가 되었고, 2013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로 다시 한번 출마한 오쓰지카나코가 비례 선 순위 당선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하며 일본 최초이자 동북아시아 최초 전국단위 선거에서 당선된 성소수자 정치인이 되었다.

양대 정당가운데 상대적으로 중도에 가까운 정당이 최초의 성소수자 의원을 배출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새누리당에서 최초의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다니엘 튜더의 주장은 참고할만한 사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의 DADT 정책 시행과, 미국의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법률이었던 DOMA의 통과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 그리고 일본 우익정당인 자민당과 정책보다는 계파적 차이가 더 큰 일본민주당의 배경은 상대적 진보성향이 성소수자 공직자 배출의 조건은 아닐 수 있으며, 결단과 전략의 문제라는 다니엘 튜더의 주장을 강화한다.

보다 정확해진 성소수자 인구 추정

한편, 취임 첫해 연두교서에서 DADT 폐지선언을 시작으로 올해 연두교서 최초로 LGBT를 호명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해야 한다. DADT를 시행한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과 DADT를 폐지한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 사이의 10여 년 동안 네오콘과 이라크전쟁의 부시가 있었고,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성소수자 친화 정책은 부시 정부의 신보수주의 정책의 반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은 90년대까지의 연구결과에선 2%부터 10%까지 천차만별로 추정되었던 전체 인구대비 성소수자 비율이, 2000년대에 들어 보다 신뢰성 높게 집계되기 시작한 점이다. 에디슨 미디어리서치와 미토프스키 인터내셔널이 실시한 2004년과 2008년 미국 대선 출구조사⁵⁾에서 성적체성을 LGB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로 나타났다. 비슷한 결과는 2011년 UCLA 법대의 연구⁶⁾(LGBT, 3.8%)와 2012년 갤럽의 조사⁷⁾(LGBT, 3.4%)에서도 나타난다.

한편, LGB 그룹의 투표 성향은 2004년과 2008년 모두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이는 각각 77%와 70%가 존 케리와 버락 오바마에게 투표한 것으로, 이성애자 그룹보다

5) 'Evaluation of Edison/Mitofsky Election System', Edison Media Research and Mitofsky International, 2004-2008

6) 'How many people ar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Gary J. Gates, 2011

7) 'Special Report: 3.4% of U.S. Adults Identify as LGBT', Gary J. Gates and Frank Newport, 2012

월등히 높은 민주당 지지를 보였다. 이는 2008년 기준 등록 유권자 1억 2900만 명 가운데 LGBT 그룹은 517만 명으로 오바마와 매케인의 표차인 952만 표의 54%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에디슨 미디어리서치와 미토프스키 인터내셔널의 출구조사 결과중 성소수자 비율을 한국 대선에 대입시킨다면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과반득표 당선이 이뤄진 18대 대선에서 1, 2위 표차인 3.6%보다 많은 LGBT 유권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접전으로 치러진 15대, 16대 대선의 표차도 각 1.6%와 2.3%로 LGBT 유권자보다 적다고 볼 수 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접전으로 치러진 세 번의 대선에서 두 번 패배하고 한번 승리한 새누리당에게 성소수자 유권자는 재집권을 위한 현실적인 숫자일 수 있다. 더군다나 18대 대선에서 LGBTI 그룹은 미국 LGBT 유권자의 투표성향과 유사하게 76%가 민주당에게 투표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⁸⁾

앞서 언급한 미국 갤럽의 성소수자 인구 비율 조사결과(3.4%)를 한국인구 5134만 명에 대입하면 국내에는 약 174만 명의 LGBT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하며 지지를 흡수하려 했던 14만 명의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가족 보다 많은 숫자이다. 조금 무리한 가정법을 쓰자면 174만 명의 성소수자가 특정한 지역에 모두 모여 살 경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인 21만 명을 기준으로 8명의 국회의원이 배당될 수 있다. 현재 원내 제 3당의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규모이지만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성취한 공직선거 당선증은 아직 없다.

2008년 종로 선거를 돌아보며

최현숙 선거는 과소대표 되고 있는 성소수자의 정치를 해결하는 시도였고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사회에 충격을 던졌고 지역구의 상징성도 온전히 흡수했다. 정치, 행정, 외교, 경제의 중심인 서울 종로구에서 트랙퀀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은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당선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정치신인, 그것도 성소수자의 당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로 가는 문은 비례대표 정원이 54석, 지역구 정원이 246석으로 산술적으로는 지역구의 문이 더 넓다.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한 조건은 보통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며 터전을 닦거나, 출마자 본인이 명망가이거나, 또는 소속 정당의 실세에 기대어 텃밭지역에 공천을 받는 방법이 있다. 2008년의 최현숙은 어느 조건도 해당되지 않았다. 물론 현재 정치활동을 하는 성소수자 가운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으며, 조건을 충족했지만 정치에 뜻을 가진 성소수자도 알려진바 없다. 설령 조건을 충족하며 정치에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될 것을 쉽게 바라보기는 어렵다.

결국 더 이상 지역구 선거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출마하는, 또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가운데 커밍아웃을 하고 지역 터전을 닦을 성소수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소수자 정치를 위한 목표를 갖고 선거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당선권에 오를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성소수자의 비례대표 출마는 미약하나마 가장 현실적인 설계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출마는, 출마자 개인과 조직이 소모될 가능성을 줄이며, 더 많은 성소수자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또한 전국구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살

8)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고 있을 174만 성소수자가 자신과 같은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공직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성소수자의 공직 진출 꼭 필요한가?

당장 2016년 총선에서 진보적 정치성향의 성소수자 국회의원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역할과 성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회의론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성소수자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 운동 전체가 전력을 쏟는 것 보다, 19대 국회에서처럼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인 의원들을 지원하면서 차별금지법 등의 주요 입법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성소수자 운동진영이 절약할 수 있는 노력보다, 성소수자 당사자 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의회정치는 더 많은 성과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의원발의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1986년, 1988년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4년까지의 민법개정안 4건 가운데 3건(나머지 한 건은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은 여성의원인 대표 발의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정당법에 의해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여성 50% 의무 공천이 처음으로 적용된 17대 국회에서 16대 국회보다 2배 많은 여성의원인 당선(16대: 15명, 17대: 39명)되며 여성관련 법안의 여성의원 대표발의가 6배 이상 급증(16대: 24건, 17대: 149건)한 사례도 당사자 정치의 중요성을 증명한다.⁹⁾

대한민국이여 커밍아웃하라!

2016년 총선에 성소수자가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 글의 고민은, 사실 2008년 종로선거의 시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정치의 잔잔한 물결에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라는 파문을 일으킨 성과보다 조금 더 전진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언론¹⁰⁾이나 혐오세력이¹¹⁾ '불심으로 대동단결' 또는 '판문점에 UN 본부 유치'를 외치는 후보들에게나 불던 '이색후보'라는 평가절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당선되는 것이다. 성소수자 공직자의 당선을 위해 성소수자 운동 전체가 다시 한번 나서야 한다.

진보정당 또한 2008년과 같이 결단해야 한다. 정치 1번지의 지역구를 성소수자 후보에게 공천한 정신을 되살려 성소수자 후보가 당선되어 돌아올 수 있는 비례대표 순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당 강령 정신의 실천임은 물론이고, 보다 구체적인 인구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막대한 숫자의 성소수자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한국정치 삼분지계의 시작점이다.

2008년보다 나아지지 않은 성소수자 인권 현실 앞에, 진보정치가 위기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이 함께 찾을 해법은 '대한민국이여 커밍아웃하라!'로 시작되는 2008년 최현숙 후보의 출마선언문 속에 있다.

9) '여성대표성 확보의 기제로서 할당제 효과', 김은경, 2010

10) "총선 앞으로...스포츠맨·방송인 등 이색 후보들", <뉴스시스>, 2008. 3. 7.

11) '[긴급]MBC 항의전화-동성애자후보 방영', 에스더기도운동 공지사항, 2008. 4. 11.

<토론문 메모>

시민/유권자로 성소수자에게 다가가는 진보정치

토론 :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진보정당의 역사와 함께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세력화, 각 부문의 핵심 이슈들을 의제화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임.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진보정당의 역사에 따른 성소수자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 각 당의 발표문은 그런 의미에서 연도별, 의제별로 자세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봄. 사회운동 특히 여성, 장애, 성소수자의 경우 조직의 존속 여부에 따라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보정당의 분열과 창당의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 역사의 발자취를 구축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곤 함. 기록된 역사는 이후 사회운동과 정당 정치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 흔적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시민/유권자로 성소수자에게 다가가는 진보정치]라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제목임. 성소수자가 특정한 정치적 이해를 가진 시민/유권자로서 '민원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에도, 진보정치의 성과를 바라고 있는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통해 현 이성애 중심 사회, 정치체제에 다양한 요구와 압력을 전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 박상훈 교수의「정당의 발견」에서 일부 인용하자면

운동으로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운동으로 시장경제체제와 사법질서를 운용할 수 없다. 운동으로 정치 과정 밖에서 불만과 항의를 조직할 수 있지만, 공공 정책의 내용을 형성하고 이를 정책 수용자 집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만들 수 없다. (중략) 정부 영역에 "독립적인 대안 세력"으로 참여할 것이냐의 차이는 크다.

때문에 성소수자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성소수자 관련 주요 정책을 진보정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가 정당에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임. 또한 성소수자 관련 의제들이 현실화되기 위한 로드맵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후보자의 선거 승리 비전을 보이는 것으로 정당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야 할 것.

그러나 현 진보 정당은 당위로서 '성소수자 인권'을 '부분적 과제'로서 다루는 것에 그치고 있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우선 정의당 정혜연 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양당체제에서 원내 비교섭 단체로서 또는 원내로 진출하지 못한 정당으로서 갖는 물질적 토대의 어려움이 정치활동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임. 예산은 곧 그 사업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는데, 성소수자위원회만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당의 재정 상황 속에서 정책개발은 차치하고, 부문위원회 사업비 지원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향후 부문위원회

의 발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봄. 어떤 경로와 기준으로 사업비를 확보, 책정할 것인가를 중앙당에서 정리가 되어야 함.

둘째,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 성소수자의 인권 감수성을 자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 진보정당이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좀 더 민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원 개개인의 의식 수준까지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과거 진보신당 최현숙 후보가 출마하였을 때 당내 동상이몽이 지금이라고 더 나아진 것은 아님. 레즈비언이 커밍아웃을 하고, 그것도 지역구 후보로서 출마했다는 것은 어떠한 정당도 시도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었지만, 한편에서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염려하는 시선들이 혼재해 있었던 것이 사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 이를 신념으로 한 후보는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정당은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집합체이지만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인식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론과 인권 의식 개선 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셋째, 성소수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 혹은 논의가 있으나 당원들 사이에서 이것이 의제화 된 적이 없다는 점일 것임.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기존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중심, 이성애중심주의 정치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드러내고 정당 정치를 통해 직접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임.

그런데 그 전에 '성소수자의 정치세력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정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정치세력화'는 종종 특정 이해를 가진 세력이 정치영역으로의 진출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되곤 함. 그러나 여성 할당제를 통한 '여성정치세력화'의 딜레마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자에 대한 토크니즘 정도로 활용되거나 정치영역 내에서의 성소수자를 대변하는 것으로만 그 역할을 한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모든 성소수자는 자신의 처지와 조건 때문에 대다수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임. 이와 관련하여 노동당 박자민씨의 발표문 중 '보다 정확해진 성소수자 인구 추정' 부분에 대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음. 자신의 존재 기반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규정짓는 요소이기는 하나, 성소수자라고 해서 진보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 진보정치가 유권자인 성소수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고 관철시켜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유권자로서 성소수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정당 내에서의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 결정권을 가진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함. 이것은 여성이나 장애인도 마찬가지.

퀴어 정치학은 정치 영역으로 성소수자가 '끼어들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판짜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함. 기존 이성애 중심의 질서 틀을 바꾸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여기서 정당의 역할은 진보 정치의 한 축을 성소수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정치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 또한 당원들의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마련하여 당 외적인 행보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화를 만들 때 성소수자 시민/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치의 관계 모색에 관한 토론문

한가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2004년 여름 무렵으로 기억한다. 한 선배가 무슨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었다. 어디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곳, 강의실만한 크기에 낯선 사람들 수십 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워대며 열띤 회의와 토론을 늦게까지 이어가고 있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건설하기 위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에는 나중에 친숙해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회원들(당시 나는 친구사이 신입회원이었다)도 있었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쟁쟁하게 활약하는 분들도 있었다. 당비만 내던, 그리고 성소수자 단체에 첫 발을 담근 나에게는 낯설고 불가해한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그 열기, 자욱한 담배연기, 그 얼굴들. 성소수자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그분들을 위원회 이름으로 별로 만나지 못했던 것은 같지만, 그 열정 있던 공간의 모습은 진보정당과 성소수자를 함께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다.

성소수자위원회가 건설된 직후 몇몇 단체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공동성명이나 연대단위에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2004년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를 준비할 때에는 실제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과 단체는 위치나 성격이 서로 다른데, 연대단체 차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오랜 회원이 있는 친구사이에서도 나온 이야기였다. 나로서도 좀 어색한 점이 있었고, 당에는 당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원내정당으로서 의회 안에서, 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준국가기구가 단체들과 섞이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결국은 같이 준비하기로 했고,¹²⁾ 이후에는 점차 별다른 논란 없이, 지금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같은 연대체에도, 함께해 오게 됐다. 그렇지만 당시 단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거 말고 딴 거’ 하기를 바랐던 흐름, ‘우리랑 다른 데’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이다.

2006-7년 무렵에는 당사를 자주 오갈 일이 생겼다. 성소수자위원회 중심으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꾸려졌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 만들어졌다. 나는 공동연대 운영위원으로, 연구모임에는 친구사이 담당자로 참여했었다. 이때를 계기로 트랜스젠더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어 지금도 이러저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 연구모임에서 역시 1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¹³⁾ 나로서는 당이 내 활동의 영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셈이다.

12) 2004년 제7회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학교는 청소년 이반모임 Any79, 고려대학교 동성애자모임 사람과사람, 동성애자인권연대, 연세대학교 이반공동체 컴투게더,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서울대학교 이반모임 QIS,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7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최했다.

13) 연구모임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단체들에게 참여를 요청하여 2006년에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당사에서 회의를 했고, 당 기금으로 간담회를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따내서 책을 내기도 했었지만, 간사 역할을 하던 정책연구원이 그만두고 성소수자위원회 담당자도 없어지면서 회의 장소도 친구사이 사무실로 옮겨가고 자연스럽게 단체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이어오고 있다. 연구모임을 조직하는 실무를 하고 간사 역할을 하던 정책연구원은 지금도 개인연구자 자격으로 연구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결합했다가, 이제는 다른 적을 가지고 참

이때는 사실 당이 먼저 일을 벌였고, 당직자와 전문가를 투입하고 단체들을 조직해서 참여를 요청하고, 당은 법안을 만들고 국회대응을 고민하고 단체들은 단체대로 국회대응에 참여하면서도 대중적 활동, 연구, 홍보 등의 역할들을 했었다. 당이 이슈를 잡고, 조직하고,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기관과 상근자, 당 안팎의 전문가들이 움직였다. 성소수자들을 모았고, 단체 결성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직접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2005년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진보국감” 역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방송과 언론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개선, 학교 안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개선, 형사절차과정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개선 등의 의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고,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는 보고대회도 열었다. 생판 ‘국감대응’이라는 것을 모르던 단체 활동가 입장에서는 보고대회에서의 논의가 새로운, 제도정치 안에서의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대응방식으로 신기하기도 했다.

2006년 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이 불거졌을 때에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힘을 보태줬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함께 주최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안에 맞서는 안을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나중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마련한 초안을 가지고 또 18대 국회에서 권영길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성소수자위원회가 자리잡으면서 상근자를 배정받기도 했고, 성소수자 정치세력회와 진보정치에 관심 있는 활동가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줬고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성소수자 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게 했고, 여의도에 다니는 법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진보정치가 성소수자 의제에 관해 제기하고 논의할 공간을 열어주고 직접 지원하고 참여해 왔던 순간들이 있었다.

2.

그렇다고 진보정당과 성소수자 운동과의 관계가 마냥 좋았다고 하다가는 낭만화할 생각은 없다. 그 과정은 지난한 협상과 투쟁이기도 했고, 사람 한두 명의 있고 없음으로 변하는 일도 많았다. 당 상근자는 언제나 오래 버티지를 못했고, 당 차원에서 사업과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애초에 진보정당이 성소수자 관련 의제를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이미 다른 발제문에 나와 있다. 또 운동(물론 진보정치 ‘운동’ 역시 인식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경계와 성찰을 필요로 하고, 제도/제도화/제도정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물음들을 가진다. 그래서 진보정당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비판과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고, 진보정치와 성소수자 운동이 한몸이거나 동의어가 되기도 힘들다. 원내 정당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19대 국회가 열렸을 때 한 의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사실상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거의 그대로 발의했다. 18대 국회 때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안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아마 이전 국회에서 내놓았던 안이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당혹스러워했고 항의했다. 맥락이 있는 법안을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

여하고 있는 활동가가 더 있기도 하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역시도 함께했었는데, 이때에는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와 함께 연중기획으로 “가족정책포럼”을 매월 공동으로 당사에서 열기도 했었다.

었다. 이후 외려 의원실과 통로가 열리는 계기이기도 했고,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운동과의 소통이 사라졌을 때의 한 모습이기도 했다.

2013년 균형법상 추행죄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가 열리고, '계간'이 '항문성교'로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한 의원실에게 소통을 요청했다. 단지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문제를 넘어 이것은 '동성애 범죄화' 조항으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현실을 드러내는 문제였다. 직접 의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고, 보좌관들과 미팅이라도 잡아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자료만 보내주고 사실 끝이었다. 다른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긴 했지만,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은 19대 국회 초기에 진선미 의원실에 가서 직접 의원에게 연구모임 소개와 관련 이슈 브리핑을 할 수 있었다.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에도 적극적이었다. 생활동반자 법안이나 균형법 폐지안은 의원실에서 직접 만들었지만,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활동가들이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 의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할 때도, 솔직히 반응은 그저 그랬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그나마 선뜻 나서주는 모습으로 인상이 남아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진보정당을 덜 찾고, 덜 기대하게 되었던 것 같다. 물론 개별 의원들이나 위원회 차원으로 진보정치와의 관계를 바라본다면 그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장면들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가온다. 몇몇 활동가끼리는 '어차피 말해도 안 되는 의원'들의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안 그래도 불편한 게 당이고 의원실이다. 진보정당과의 관계에서는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접점이 더 있는 듯해서 더 위축되는 이상한 경험. 정당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러면 어디를,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지?

성소수자 운동이 곧잘 하고 있는 이슈들 말고도, 진보정치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놓친 것도 큰 문제이다. 진보정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인권적인 호포포비아 종교편향 인사들이 법원과 정부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장악할 때, 무엇을 했는가. 교육부가 '반동성애' 단체들의 요구와 공문을 첨부해서 교과서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청소년 성의식 운운하며 학생인권조례들에 재의를 요구할 때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보수정당 의원이 대놓고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언행을 할 때, 일언반구라도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칠 때 진보정당의 의미 역시 스스로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운동과의 관계 맺음은 이런 역할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종종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정당이 부르기도 한다. 내가 하는 사건을 국감에서 다루고 싶다고 연락을 하기도 한다. 간담회나 교육 자리가 있으니 와달라는 이야기는 반갑다. 사실 당원이나 위원회를 넘어 당 지도부와 공직자들에게부터 교육이든 이슈 브리핑이든 하고 싶다. 그런데도 얼마 전 한 활동가에게 진보정당에 와서 어떤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심코 내가 한 이야기는 "동원되고 이용될 텐데요, 뭘"이라는 말이었다. 말하고 나서 이내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은 정당에게 미안해졌지만, 이것은 사실 안타까움과 답

답함에 가까웠던 것 같다.

3.

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누구나 이야기하는 진보정치의 위기에서 오는지도 모른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부터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조직 보위를 위한 논의로 쉽게 흐르게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조직 보위'가 장기적으로 '보위'에 도움이 된 적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른바 위기 속에서, 무엇무엇을 위해 진보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당의 존재이유는, "당을 존립을 위해"라는 말로 갑작스레 변하기도 한다.

성소수자 의제는 당사자들에 국한되는 의미를 넘어 가치의 문제이고, 제도와 체제의 문제이다. 인권, 인간으로서의 존엄, 평등, 진보의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박원순 서울시장같이 정치적 계산으로 이용하는 모습은 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것은 정치적으로 효과 있는 전략도 아니다. 소수자에 대한 태도, 인권의 가치, 존엄성의 문제를 흥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든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를 넘어서 소수자 의제를 가치의 문제로 제대로 제기하고 있는지는, 내가 불민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잘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의문이다.

성소수자 의제('성정치위원회'의 이름처럼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가로지르는 성정치)는 당에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면피되거나 할 건 다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그럴 듯한 말로 성소수자 단체들의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한다고 해서(때로 선거에 참여한 단체 활동가가 답변서를 담당하면서, 운동이 묻고 운동이 답하는 상황도 있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책을 되뇌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넘어서 당 차원의, 진보정치의 중요한 의제로서, 이것을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연결시키고, 사회적 변화와 진보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중요한 과제이고 진보정당의 중요한 존재의의라고도 생각한다.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치의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험과 감정과 생각들을 나누고 싶었다. 운동과 진보정치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관계가 형성될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성소수자 운동 쪽에서 진보정치를 추동하는 게 있을 것이고, 진보정치가 성소수자 운동과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할 테지만, 진보정당 차원의 인식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조직의 구축 없이는 쉽게 풀리지는 않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이 성소수자 운동을 자주 찾아오고 부르면서 당의 정치력을 가지고 발휘해주었으면 좋겠다. 위원회 중심으로만 사업을 펼치려고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 쉽다. 당 자체가 해야 할 일과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진보정치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하며 성정치, 성평등을 비롯해 사회적 이슈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미 어디선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도 좋겠

지만, 안에서 당 활동가와 조직, 상근자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자원과 네트워크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조직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한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발전적 관계의 모색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대중조직으로서 위원회를 넘어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의 연대모임 (Gay-straight alliance, GSA)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당직자들에 대한 질 높은 필수적이고 직접적이고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이슈 브리핑, 위원회/단체와의 간담회, 네트워킹, ▲성정치 관련 당 상근자와 팀의 구성(팀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당내에서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상근자를 포함한 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당내외 법/정책/이론적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결, ▲이를 통해 비범죄화,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 가족구성권, 성별정정 관련 제도 등 핵심적인 이슈는 반드시 잡고 나가겠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 대안 제시(이러한 이슈들은 어떻게든 진보정치의 성과로 남길 수 있는 이슈들이다. 이 이슈들에 대해 운동이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동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의 권한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연대, ▲당 정책위원회 등 당 기구가 직접 성소수자 단체들을 찾아가고 이슈를 듣고 귀찮게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 ▲성소수자 진보국감 시스템의 복원, ▲성장하고 있는 성소수자 운동의 자원을 활용한 당/위원회 활동가들의 개발, 교육 등을 해 나갈 때, 운동과의 관계라든가 진보정치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간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구조와 체제와 현실에서 싹트고 정치권에서 부추기고 확대하고 확산시킨 혐오와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성소수자들은 가장 앞에서 당하고, 경험하고, 체감하고 있다. 이런 현실들을 인식하며 진보정치와 성소수자 운동이 따로 또 같이, 나름의 역할들을 가지고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